

## ‘불법개조 굉음’ 배달 오토바이 떼질주 일상화... 단속은 전무

나주혁신도시, 경찰순찰차 출동음 유사한 경음기 부착 사례까지  
 교통신호 무시·아파트 단지서도 굉음 질주 일삼아 주민들 몸살  
 교통안전공단 “지자체·경찰 측, 합동단속 요청 단 한 번도 없어”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소음기를 불법으로 튜닝(개조)한 배달 이륜차(오토바이) 떼 질주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다.

문제는 소음기 불법 개조에 이어 경찰 순찰차와 교통경찰용 오토바이에 장착된 경음기처럼 ‘크고 강력한 소리’를 내는 유사 경음기를 불법으로 부착한 채 ‘뽁~뽁’ 소리를 내며 운행하는 오토바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19일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한여

름부터 최근 늦더위로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지내는 날이 많은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를 ‘뽁~뽁’ 잇달아 요란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극심한 소음이 유발되고 있다.

배달라이더들의 운전 형태를 살펴보면 소음 유발은 예사인데다 교통신호 무시, 역주행, 인도 질주 등 준법 운행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시간에 쫓기며 주문 물품을 제때 배달해야

하는 업종이지만 배달라이더들의 불법 운행 형태는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다 높은 엔진출력을 얻고, 과시용 굉음을 내기 위해 출고 당시 제조사가 장착한 소음기를 탈거하고 ‘비인종 소음기’로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가 넘쳐 나지만 단속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있다.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 교통행정과에 문의한 결과 이륜차(오토바이) 불법 튜닝 단속 실적은 전무했다. 또 주민들이 오토바이 굉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단속(조사) 권한이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 경찰 모두에 있지만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요인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주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단속에 나서고 있고, 경찰은 형사 처벌, 지자체는 과태료 발부 등 행정처분 업무에 만 치

중하는 것도 단속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에 나주시와 나주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요청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광주광역시에서 시에서 강력히 요청해 매월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불법소음기 튜닝 오토바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 소음초과·미사용 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주=송준표기자



나주혁신도시 도심을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동호회 무리.

## 민주, 김건희 리스크 공세... “윤석열 대통령, 특검 결단해야”

“순방 외교보다 리스크에 더 관심”...대통령실 의혹 등 진상규명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류 의혹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조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 순방 동행과 각종 의혹을 짚고 ‘국정 농단

비화’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김 여사 동행을 지지하고 “이번 해외 순방은 중요 외교 일정인 예정돼 있지만 김건희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순방은 김 여사 리스크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미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대통령 공관 지인수의 계약 등이 문제가 돼 있다”고 했다.

또 “영빈관 신축 계획에 김 여사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며 “대통령실을 둘러싼 수상한 의혹과 논란엔 항상 김 여사가 있지만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도, 김 여사에 대한 관리도 손을 놓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루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며 “그간의 문제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지금의 리스크가 되돌릴 수 없는 국정 농단으로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취재본부

## ‘학업·일자리 부족’ 전남청년 年1만여명 유출

전남의 청년들이 매년 1만명 가량 학업과 일자리 등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최근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며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정 실·국이 아닌 전남도 전체가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어려운 문제인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전남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거환경, 양육환경 등 여러 여건을 유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강문성 전남도의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5년간 전남청년 5만2066명 타지역 유출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인구는 총 1만8000여 명이 감소했고, 이 중 60% 가량인 1만여 명이 청년층이다.

청년 유출의 주요 원인은 학업과 관련이 있거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강 의원은 진단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 내 청년들이 매년 1만명씩 지역을 떠나고 있는데, 행정이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계속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년) 전남지역 청년층(만 18~39세) 순유출 인구는 5만2066명으로, 매년 1만여 명 안팎의 청년이 전남을 떠나고 있다.

전남의 전 연령대 시·도 간 순유출 인구가 3만4106명인 점을 고려하면 유독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많은 상황이다.

김재환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